



이재명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물꼬...지방선거서 통합단체장 선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 12. 18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

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조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혹은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을 발의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및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추진돼 온 가운데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호응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장을 뽑자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시한'을 제시하며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이 계류돼 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국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대해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충청발 '5국 3특' 드라이브...지방선거 영향 '촉각'2월 입법 주문, 특별법 급물살 타까...현실적 난관 많아" 신중론도 2026년 6월 중원 선거관도 변화까...여권서 '강훈식 차출론'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5국 3특 균형발전 전략' 실현을 위한 신호탄을 쏘았다.

5국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조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뉘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중 중부권에서 그 첫발을 떤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담긴 정책 드라이브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와 별개로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셈법이 분주한 모습이다.

與의원들과 간담회서 제안... "행정기관 소재지·명칭도 전향적으로"

대전·충남 의원들 '黨특위' 요청...국힘,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이미 발의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과 충남이 통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지방분권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서 '총대'를 매고 참병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수도권 과밀 상태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엮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면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충청권의 경우 지방분권 실험의 '첫 단추' 역할을 맡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지역이라는 진단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특정 진영에 대한 지지세가 약한 편인 데다 마침 국민의힘에서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두는 등 여야 간 협의의 가능성도 열린 상황이다.

아울러 수도권 기능 및 인구 분산의 관점에서도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충청권이 제격이라는 시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을 완료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위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시한을 정해두지 않을 경우 자칫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참석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2월에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있긴 했지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3월께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당정의 이런 속도전에도 실제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이전에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새 청사 지정이나 명칭 문제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논의 진전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며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논의가 가로막혀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선거가 하나로 합쳐져 '통합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로 바뀐다면 각 정당 역시 중원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번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충청지역에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느냐 역시 선거 판세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여권 내부로 눈을 돌리면 이번 일을 계기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가 실제로 열린다면 그 자리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중앙감을 갖춘 강 실장에 대한 '차출론'이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채봉 기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2026년 설 전에 처리 예정"

내란재판부법 법사위안으로 통과 못해...수정안 반대 김용민에 "저의 의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판·검사 및 경찰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을 "2026년 구정(2월 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열고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왜곡죄 도입은 판사·검사 또는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관련) 법률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견들이 있다"면서도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법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돌

려싼 위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 차원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선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안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놓아 했고, 그게 지금의 수정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만으로 사법부에 엄청난 긴장을 주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그것으로 국민이 열망하는 재판 속도 등이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 안과 내용이 많이 다른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통수 수정안을 비판한 점을 겨냥한 말로 보인다.

